

여론브리핑 제47호

EAI · 매일경제 “긴급 정치안보인식 조사”

EAI 동아시아연구원 · 매일경제 공동 긴급 정치안보의식 조사

노 전대통령 서거, 북핵실험 등 국내외적으로 정치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들이 주로 지지율 변동 추이에 집중하는 가운데 정작 현재의 혼돈스러운 정국 하에서 **민심의 불안감**과 이에 따른 **정치적 태도변화**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는 국정지지, 정당지지의 변화추이를 점검하는 한편, 국민들이 정치안보 영역에서 느끼는 불안감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조사했다. **정부 및 정치권에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

조사일시 : 6월 5일

모 집 단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 600명

표본추출 : 성, 연령, 지역 인구비례에 맞게 표본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 무작위표본추출을 전제, 95%신뢰수준 ±4%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EAI 긴급 정치안보인식 연구팀

팀 장: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연구진: 이숙종(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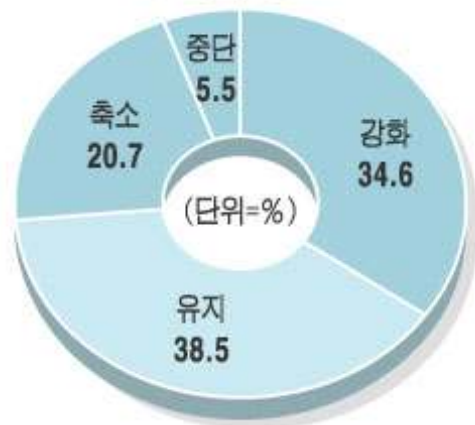
전재성(EAI 아시아안보센터소장, 서울대 교수)

이근수(EAI 거버넌스센터 부소장)

정원철(EAI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햇볕정책에 대한 선호



최우선적인 국정운영 과제 인식 변화(단위=%)

2009년 2월 조사

2009년 6월 조사

2009년 2월 조사	2009년 6월 조사
경제양극화 완화 33.9	국민 통합 28.3(14.4%p▲)
경제 성장 26.6	경제양극화 완화 27.2(6.7%p▼)
국민 통합 13.9	경제 성장 19.3(7.3%p▼)
정치 개혁 7.4	남북관계 개선 7.6(3.4%p▲)
삶의 질 개선 6.0	정치 개혁 6.6
국제 경쟁력 강화 5.7	삶의 질 개선 4.9
남북관계 개선 4.2	국제 경쟁력 강화 3.2
국가안보 강화 1.5	국가안보 강화 2.4
기타 0.7	기타 0.3
모름·무응답 0.1	모름·무응답 0

[전체 주요 내용]

1. 불안한 정국, 국민 관심 “경제에서 국민통합” 으로 이동

- 노대통령 서거, 북핵실험으로 국민불안 가중
- 국정 우선 순위 “경제에서 국민통합으로”

2. 노대통령 장례식 이후 요동치는 정국

- 대통령 및 한나라당 지지율 하락
- 민주당 상승세 둔화
- 무당파 총의 급증

3. 북핵 2차 실험과 한국인의 안보인식

- 안보불안감 고조
- 한미동맹은 안보 지렛대
- 햇볕정책(대북포용정책)은 유지/확대 되어야

[여론브리핑 제47호 보기]

1. 불안한 정국, 국민 관심 “경제에서 국민통합” 으로 이동

▣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국정 최우선 과제 변화

- 2월 조사 경제양극화, 경제성장 등 경제문제 우선
- 6월 조사에서는 “국민통합” 최우선 > 경제 양극화 > 경제성장
- 북핵 실험 이후 남북관계 개선 꼽은 응답도 늘어

[표1] 최우선적인 국정운영 과제 인식 변화(2월-6월)(%)

2009년 2월 조사		2009년 6월 조사	
경제양극화 완화	33.9	국민 통합	28.3(14.4%p▲)
경제 성장	26.6	경제양극화 완화	27.2(6.7%p▼)
국민 통합	13.9	경제 성장	19.3(7.3%p▼)
정치 개혁	7.4	남북관계 개선	7.6(3.4%p▲)
삶의 질 개선	6.0	정치 개혁	6.6
국제 경쟁력 강화	5.7	삶의 질 개선	4.9
남북관계 개선	4.2	국제 경쟁력 강화	3.2
국가안보 강화	1.5	국가안보 강화	2.4
기타	0.7	기타	0.3
모름·무응답	0.1	모름·무응답	0

경제대통령 보다 통합대통령 우선

최근 국내외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변화는 국민들의 인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17대 대선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가 큰 투표차로 당선된 데에는 경제 살리기에 국민적 열망이 모인 결과였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가 큰 몸살을 앓고 있던 지난 2월 조사에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경제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로 ‘경제양극화 완화’ 를 꼽은 응답이 33.9%로 가장 높았고, ‘경제성장’ 을 꼽은 응답은 25.5%로 뒤를 이었다. ‘국민통합’ 을 강조한 응답이 13.9%, ‘정치개혁’ 을 꼽은 응답이 7.4%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통합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선택한 응답은 28.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 조사에 비해 14.4%p나 증가한 결과로서 경제양극화 해소나 경제성장보다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양극화를 국정최우선 과제로 꼽은 응답은 27.2%로 2월에 비해 6.7%p 감소하고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도 7.3%p나 감소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여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급격하게 정치안정과 국민통합의 문제로 이동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충격과 함께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의 이반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야권은 대통령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며 정치적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진보 및 보수를 대표하는 논객들이 노대통령의 서거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등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내분이 예상되고 있다. 조사결과는 현재 한국을 비롯 전세계가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매진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국민통합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선택한 것은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은 국민통합이나 경제적 양극화, 경제성장에 이어 중요한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었다. 그 외 정치개혁이나 국제경쟁력 강화, 삶의 질 개선과 같은 과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응답은 다소 줄어들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위협강도가 거세지고, 한국정부는 PSI 가입을 발표하는 등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방안이 추진되면서 북핵해결의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안보환경이 악화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정치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라는 주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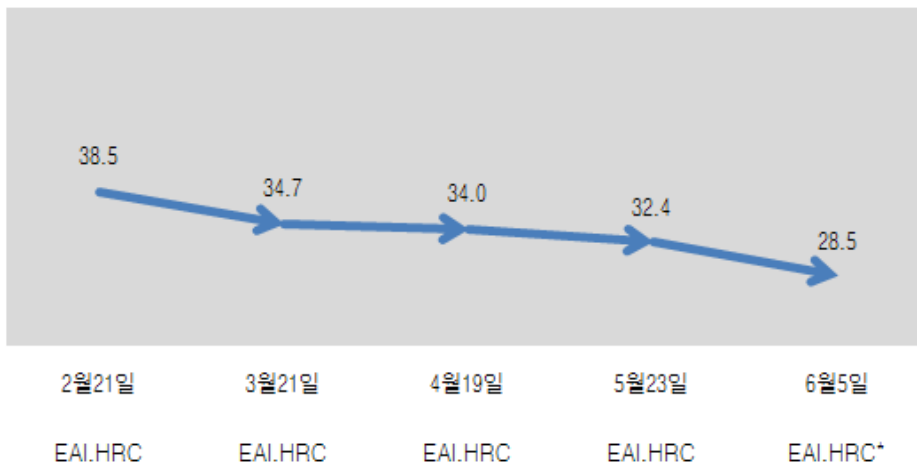
2. 노대통령 서거 이후 요동치는 정국

- ▣ 이 대통령지지율 취임1주년 이래 10%p 하락 - 2009년 EAI 조사 이래 첫 20%대로 진입
- 38.5%(2월)→34.7%(3월)→34.0%(4월)→32.4%(5월 23일)→28.5%(6월 5일)
- ▣ 한나라당, 민주당 지지추세 역전 - 한나라당 22.3%, 민주당 22.7%, 무당파 41.6%
- 노 전대통령 서거 후 2주, 한나라 지지율 추락(7.5%p▼), 민주당 상승세 주춤(0.9%p ▲), 무당파 급증(10.4%p ▲)으로 요동
-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등 군소 정당 지지율도 주춤

대통령 국정지지율 20%대로 감소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일이 지난 지금 정국은 매우 혼돈스럽다. 이명박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서거당일 실시한 EAI 5월 정기여론조사에서 32.4%를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28.5%로 4.1%p 가량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가 작년 연말부터 국정드라이브를 걸며 야심차게 맞이했던 취임1주년 시점에 38.5%의 지지율을 기록한 이래 완만하지만 꾸준하게 지지율 감소를 경험하며 대략 4개월 만에 10.0%p를 까먹은 셈이다[그림1].

[그림1] 대통령 국정지지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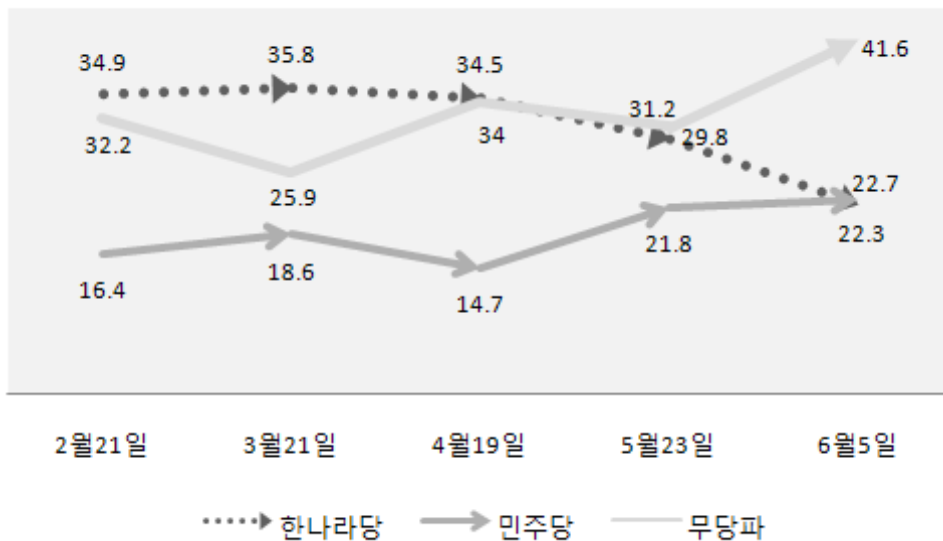
요동치는 정당지지, 한나라 22.3%, 민주당 22.7%

한편 정당지지율을 보면 혼돈스러운 정국이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 2월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34.9%, 민주당은 16.4%로 더블 스코어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

난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한나라당 지지율은 29.8%로 20%대로 내려 앉았고, 근 2주가 흐른 이번 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22.3%로 무려 7.5%p의 지지층 이탈을 경험했다. 최근 한나라당 내부의 쇄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4.26 보궐 선거 전후 불거진 내부 계파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제반 정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부 부처간 혼선, 당정간 엇박자 등으로 정부 및 여당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4월까지 10%의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지지층의 결집을 이루어 지난 5월 조사에서 21.8%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22.7%를 기록해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한나라당 지지율을 추월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2주전에 비해서는 0.9%p 증가하는 데 그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지지층 결집현상은 현저하게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지율 상승을 위한 민주당 내부의 동력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정부와 한나라당 지지율 추락으로부터 이전되는 반사이익은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그림2].

[그림2] 한나라당-민주당 정당지지율 및 무당파 규모 변동(2009년 2월-6월) (%)



급증하는 무당파층(31.2%→41.6%), 정치불안정과 냉소 확산 우려

주목할 점은 현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이탈한 민심이 갈곳 없이 표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정당도 지지 않는다고 밝힌 무당파 층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25%~34%대를 오락가락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무려 41.6% 규모로 크게 증가했다.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이나 최근 주춤하고 있는 민주당은 물론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다른 정당 역시 지지율 정체현상을 겪고 있다.

이들 정당의 지지율은 2주 전 조사에 비해 큰 변화가 없으며 미세하게나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1]). 이는 정부 여당으로부터 이탈한 민심을 제도 정치권에서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정치적 불안과 냉소가 팽배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이다.

[표1] 정당지지율 변동(2009년 2월-6월) (%)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 선진당	민주 노동당	창조 한국당	진보신당	기타	무당파
2월	34.9	16.4	2.7	6.7	1.5	2.5	3.1	32.2
3월	35.8	18.6	4.0	7.1	3.5	2.8	2.2	25.9
4월	34.5	14.7	3.1	6.8	1.8	2.9	2.1	34.0
5월	29.8▼	21.8▲	4.2	6.4	1.2	2.2	3.1	31.2
6월	22.3▼	22.7▲	1.9▼	5.2▼	1.0▼	1.7▼	3.6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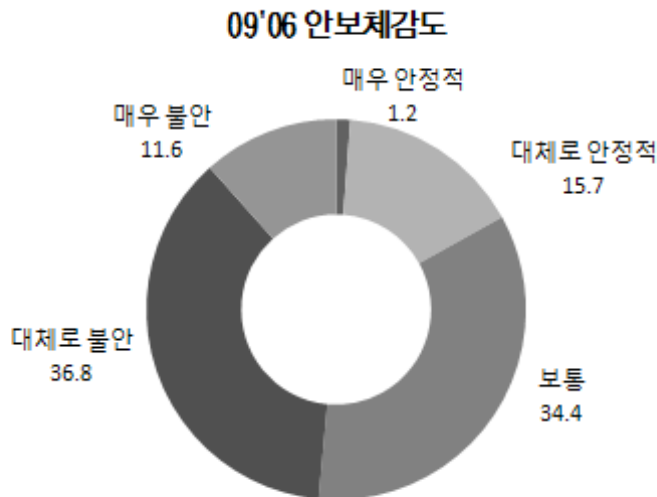
3. 여론으로 본 북핵 실험 이후 안보위협과 대응 방향

▣ 커지는 안보 불안감

- 6월 조사 : 안정적 16.9%, 보통 34.4%, 불안 48.4%
- 안보 불안하다 : 3월 29.5% → 4월 32.8%(북 로켓발사 후) → 6월 48.4%(북 핵실험 후)

지난 2차 북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의 PSI 가입 공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한국인의 안보불안감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전반적인 안보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16.9%(매우 안정적 1.2%, 대체로 안정적 15.7%), 보통이라는 응답은 34.4%, 불안하다는 응답은 48.4%(대체로 불안 36.8%, 매우 불안 11.6%)로 가장 많았다.

[그림1] 현재 전반적인 안보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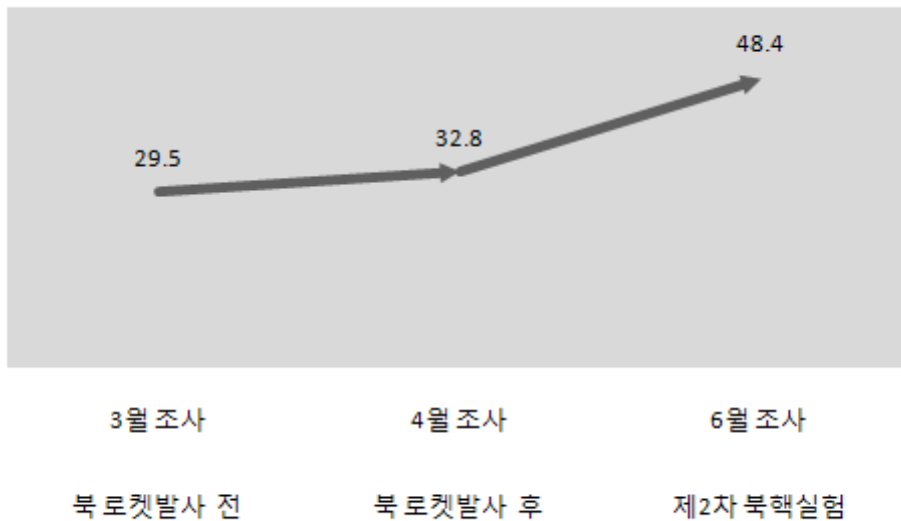


[표1]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

	매우 안정적	대체로 안정적	보통	대체로 불안	매우 불안
3월 조사	8.8	25.7	35.6	24.3	5.2
4월 조사	6.8	23.3	36.4	26.5	6.3
6월 조사	1.2	15.7	34.4	36.8	11.6

변화추이를 보면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핵실험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대포동2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던 3월 조사에는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이 불안하다는 응답이 29.5%에 불과했지만 북한의 로켓발사 후 조사결과에서는 32.8%로 약간 상승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대통령 추모기간에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진행된 이후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48.4%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했다.

[그림2] 한국의 안보 불안감 변화(3월-6월) : “안보상황 불안” (%)



▣ 안보불안 고조, 바람직한 한미관계 방향은?

- 중도(40.9%) 및 한미동맹 강화(39.7%) 우세 속 자주외교 노선(18.9%) 감소
- 자주외교노선 지지 2월 29.9% → 6월 18.9% 감소 (11.0%p▼)
-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한미동맹 강화여론이 자주외교노선 지지보다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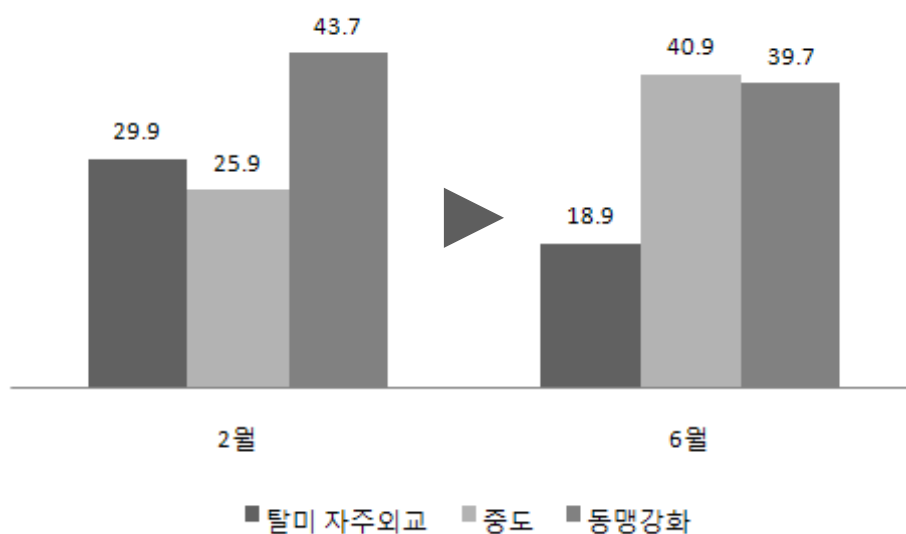
안보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의 지렛대로 이해되어온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중도적 입장과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미국의 간섭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주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자주외교노선 지지가 급감하고 있다.

지난 2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여론과 자주외교노선에 대한 지지하는 여론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장거리 로켓발사가 예정되어 있던 2월 조사에

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43.7%, 자주적 외교노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은 29.9%였다. 이번 조사에서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대해 물어본 결과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39.7%인 반면 미국으로부터 자주적 외교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18.9%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2월 조사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자주외교노선 지지에 비해 13.8%p 많았지만 이번조사에서는 동맹 강화 입장이 자주외교노선 입장에 비해 20.8%p 이상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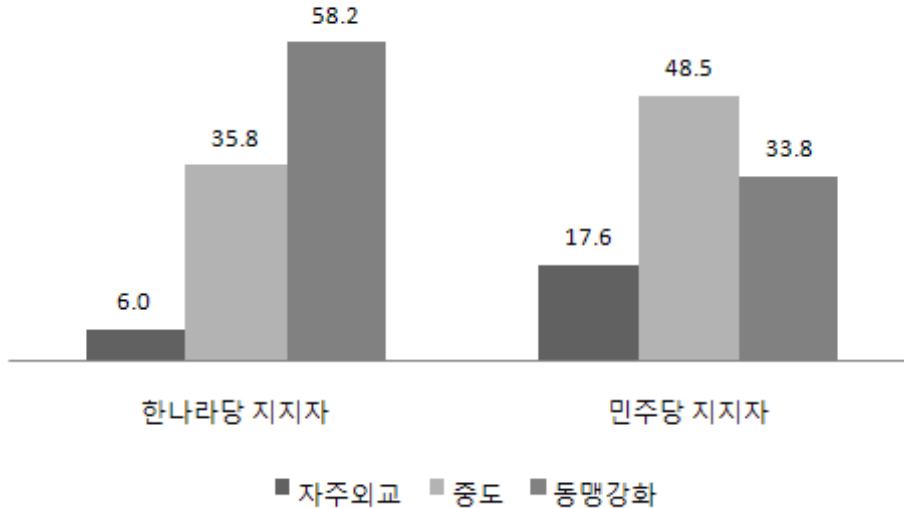
2월에 비해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은 주로 자주외교 노선 지지가 2월에 비해 11.0%p(29.9%→18.9%)나 줄어든 것이 주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2월 조사에 비해서는 43.7%에서 4%p 가량 줄어드는데 그쳤다. 대신 중도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2월 조사에서는 25.9%에 불과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40.9%로 크게 늘어났다.

[그림3] 바람직한 한미관계 선호 변화(2월-6월) (%)



정당지지별로 보면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역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58.2%로 높았고 자주외교를 지지하는 입장은 6.0%에 그쳤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33.8%에 그쳐 한나라당 지지층과는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자주외교노선(17.6%)을 선호하는 여론보다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여론이 근 2배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미동맹을 한국 안보 및 외교의 주요 지렛대라는 인식이 상당히 확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림4] 정당 지지별 한미관계 선호(%)



▣ 북한 핵실험 이후, 햇볕정책 평가 달라지나?

- 햇볕정책 유지/확대 73.1%, 축소 폐지 26.2%
- MB 지지층에서도 유지/확대 여론 강해 64.7%

대북포용정책 소위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 압박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낸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의한 지속적인 핵/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왔다.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 진행되는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은 ‘일방적인 퍼주기’로 끝나거나 심지어 북한의 핵 개발이나 군 무장에 악용될 가능성도 지적되어 온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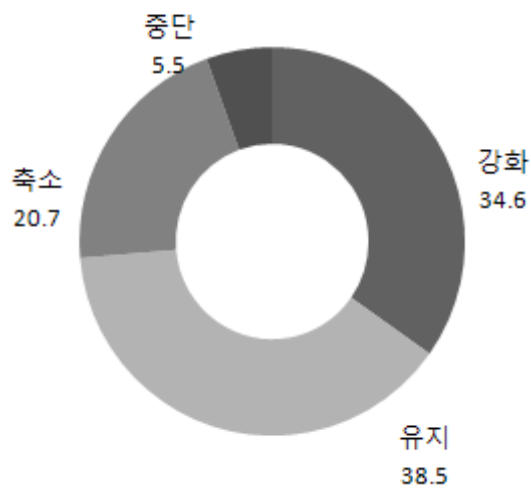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지금 국민들의 햇볕 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조사결과 국민들은 대북포용정책이 현재와 같은 안보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여전히 유효하거나 더 확대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북한의 2차 핵 실험과 그로 인한 안보불안감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은 오히려 확대(34.6%)되거나 유지(38.5%)해야 할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은 20.7%,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은 5.5%에 그쳤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햇볕정책의 기초가 확대되거나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긍정지지층에서 64.7%가 대북포용정책이 확대되거나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축소폐지 해야 한다는 입장은 34.7%였다. 이명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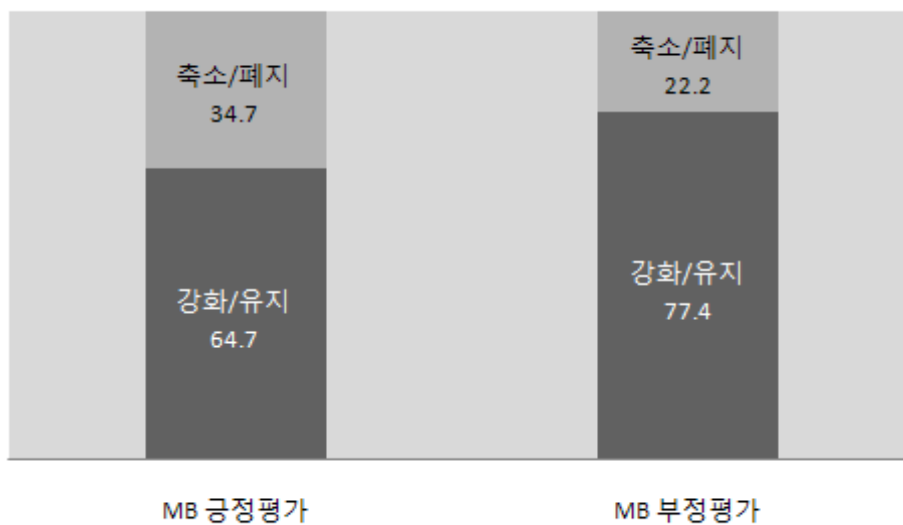
대통령 국정지지에 부정적인 응답층에서는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아 77.4%를 기록했다. 이들 중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22.2%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은 현재 북한의 핵실험이나 군사적 위협을 햇볕정책의 실패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위기 상황일수록 남북간 교류협력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교류가 검색될 경우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심각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다.

[그림5] 햇볕정책에 대한 선호(%)

09'06 햇볕 (대북포용정책) 평가



[그림6] 이대통령 국정지지여부와 햇볕정책에 대한 선호(%)



[EAI 동아시아연구원 긴급 정치안보의식 조사개요]

모집단	●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 600명
표본추출	● 2008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5\%$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응답율	●
조사기간	● 2009년 6월 5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